

미국 8배, 일본보다 10배 세계 최강 '불소' 규제

경제포커스



이진석

경제부 선임기자

불소로 불리는 플루오린은 토양 오염 물질로 규제받는다. 토지환경보전법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 지역과 임야·농지 등은 토양 1kg당 400mg을 넘어선 안 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주요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고 엄격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3100mg까지 허용되고, 일본은 4000mg이다. 미국의 8배, 일본보다 10배나 강한 규제다. 대부분의 나라는 별도의 기준조차 두지 않지만, 21년 전 우리는 세계 최강의 규제를 만들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새로 만드는 규제니 이왕이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자고 했던 모양이다.

불소 기준을 넘는 땅은 정화 작업을 해야 집이든, 공장이든 지을 수 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들어간다. 최근 5년간 불소 관련 토양 정화 비용이 수도권에서만 5853억원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2년간 불소 토양 오염 정화를 하면서 사업이 늦춰졌다. 680억원이 들었다. 서울 후암동 서울교육청 신 청사 부지, 김포시 시립도서관은 공사가 1년 늦어졌다. 최근에는 서울 상암

동 일대 신규 조각장 예정지도 불소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질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정도라면 숫자만 고치면 될 듯하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기준 완화를 원하는 곳은 건설업체들이다. 정화 비용도 부담인 데다, 6~12개월 걸리는 작업이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자금 부담과 완공 지연 등이 문제라고 한다.

21년 묵은 턱없이 높은 기준 정화 작업 수도권만 연 1000억 건설·환경업체 이해 충돌 풀어야 사회적 합의가 규제개혁 완성

반대쪽 입장도 있다. 중소기업인 토양오염정화업체 60여 곳은 일거리가 줄어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환경 오염을 막는 기업인데 규제 완화로 엉뚱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대기업 대 중소기업, 건설사 대 환경업체들의 대결 구도로 판이 싸이던 문제가 꼬일 수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혹시라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흔들리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개혁은 기존 산업의 발목에 채워 놓는 족쇄를 푸는 것이고, 신산업이

시장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은 기존 업계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일이 많다. 이런 충돌과 실패가 규제 개혁과 혁신의 길목마다 등장한다.

미국, 캐나다에서 허용되는 도수 있는 안경 온라인 판매는 안경사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는 안경상비약은 10년 넘게 13개 품목에서 단 하나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약사들이 "약물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 허용은 기존 모텔과 여관 등의 반발이 문제다. 수백 가지 소박, 안전,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하는 숙박업에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하면 되는 공유 숙박이 등장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 개혁은 기존 법령의 문구를 고치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미래를 열기 위한 새 길을 뚫는 것이다. 규제 개혁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 부처이 기주의를 깨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는 사라지게 되고,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위한 '타다 급지법'이 등장하게 된다. 결국, 혁신과 미래가 멈춰서게 된다.

김준의 맛과 섬 [162]

제주 메밀국수

제주는 화산섬이다. 땅이 척박하고 물이 귀해 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밭농사도 쉽지 않다. 해안 마을은 '바당(바다)'에 의지해 김이죽이나 보말죽으로 보릿고개를 넘었지만, 중산간 마을이 쳐다볼 수 있는 곳은 오름과 척박한 밭때기뿐이었다. 해안이든 중산간이든 쌀은 구경하기 힘들었다. 보리도 귀해 조, 메밀, 콩, 감자 등으로 식량을 대신했다. 다형스럽게 메밀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생육 기간도 짧아 이모작도 가능하다. 또 감자도 이모작을 할 수 있다. 배고픈 시절 이보다 고마운 작물이 있을까. 제주에서는 메밀을 이용해 메밀국수는 물론 썩고 버무린 메밀썩반떡, 썩 빠로 육수를 내고 살을 발라 고명으로 얹은 썩메밀칼국수, 메밀고구마반떡, 미역을 넣고 수제비를

뜬 메밀조베기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지금도 중산간 곳곳에서는 하얗게 핀 메밀꽃을 볼 수 있다.

메밀 전문 식당이 있는 광평리를 찾았다. 이곳은 해발 500m에 있는 마을인데 주민들이 생산한 메밀로 음식을 차려내는 곳이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는 중산간에 있어 가기가 쉽지 않은 데도 이른 시간부터 대기자가 많다.

메밀은 제주 농경의 여신 '자청비'와 연인이 있는 곡물이다. 자청비는 천지왕에게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여자로 태어난다. 그리고 옥황 문자에게 상으로 오곡 씨앗을 받는다.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씨를 뿌리는데 씨앗 한 종류가 모자랐다. 다시 자청비가 하늘로 올라가 씨를 가져와



심으니, 다른 곡식보다 파종이 한 달 늦었지만 수확을 다른 곡식과 함께했다. 그 씨가 '메밀'이다. 제주말로 '모밀'이라고도 한다. 거친 흙에서도 잘 자라니 꽃자왈로 이루어진 중산간에 적합했다. 여기에 푸른 잎, 붉은 줄기, 흰 꽃, 검은 열매, 노란 뿌리 5가지 색을 지닌 오방지역물로 알려졌다. '살아 시민 살아진다(살다 보면 살아진다)' 했는가. 중산간 마을의 큰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은 메밀에 의지해 살아야 했다. 오뎀이 제주 메밀만 '곱다시' 차려 오가는 길손에게 내놓는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說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하고 함께 추진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권 도시 중 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메가 서울' 발상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총선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 그렇다고는 해도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 메가시티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면 광명·구리·하남·고양·부천 등에서도 서울 편입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인구 940만명 대도시 서울시가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만 우려가 있는가 하면, '대서울' 전략이 국가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은 1963년 경기 시흥·부천·김포·광주·양주 일부를 흡수해 덩치를 2.6배 키웠다. 그 후 대도시로 급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심축 역할을 했다. 올림픽까지 유치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선망이 되는 도시 중 하나가 됐다. 작고 좁은 서울로 묶여 있었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서울은 확장 40년 만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주춤·고통·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 서울이 더 커지지 못하니 외곽에 다수의 위성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김포시 주민의 85%가

서울로 출근하는 등 위성도시와 서울은 단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은 달라 위성도시 주민들의 지역철 출퇴근,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 문제 등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은 난제를 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 인구는 2012년 10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10년만에 80만명이나 줄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서울시 인구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수축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인구 모으기' 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보 통신 기술(IT)의 발달로 지리적 경계는 희미해지고, 우수한 인재, 돈, 정보가 국경을 넘어 유망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문화, 정보,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허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경계를 넓혀 제2, 제3의 판교 IT 밸리 모델을 만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확장이 지방 공동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메가시티 조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메가 서울'이 지역 불균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 메가시티 조성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상하이 반경 300km 이내 16도시를 하나로 묶는 '장강 삼각주 일체화' 계획, 일본은 간사이 지역 광역 지자체 8개를 묶는 '간사이 광역 연합'을 통해 지역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회서 고개 숙인 윤 대통령, 국민 위한 변화의 시작 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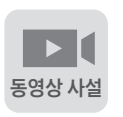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두 차례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연설 때도 이 대표를 가장 먼저 호명했다. 예선안 편성을 두고 야당에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다섯 번 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없었다. 연설 후 여야 원내 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오찬까지 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해 취임 후 가장 기쁜 날"이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헤어지면서는 "어려운 말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국회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피켓 시위를 하고, 일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거부한 채 "이제 그만두시라"는 상시 박 말까지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참고 넘겼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취임 초부터 도어스테핑 중단,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전당대회 '윤

심 논란' 등을 거치며 '고압적' '불통' 지적을 받았다. 인사·정책 등 국정 운영에서도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 스스로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은 소통의 시작이자 끝이다.

윤 대통령의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노동·교육 개혁 추진 등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하고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은 지금과 달리 탄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 처했다.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를 극복할 길을 찾아야 하고 대통령이 앞장 서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이 놀랄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도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대부분 대통령 본인과 참모들이 알고 있는 문제다. 더 과감하고 용기 있는 변화를 바란다. 그게 대통령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자동 육아휴직, '수입 반 토막'부터 개선해야 효과 있을 것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실제론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육아휴직을 꺼리는 근본 문제는 휴직을 하면 수입이 반 토막 나기 때문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대체율은 44%에 불과했다. 독일은 65%, 일본은 60% 수준이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은 150만원이다. 최저임

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더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확대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가족이나 어려운 여성 취업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임가가 70% 이상이다.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더 기피할 수 있다. 남성이 더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내년도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이 17조590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육아휴직 등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육아휴직처럼 젊은 층의 출산 결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또 탄핵정변?... 박근혜 이어 윤석열도 끌어내리겠다고?

'왕따 시켜 끌어내리기' 재미 보더니, 다시 했을? | 좌익 '통일전선' 책략에 동조했던 '비(非)좌익 언론', 이번에도?

'비(非) 좌익' 일부는 왜 탄핵에 동조하는가?

[탄핵 정변]이 또 무르익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왕따] 시켜 끌어내리려 한다. 2016~2017년에도 [좌익 + 비(非) 좌익 일부]가 야합해, 박근혜 대통령을 [왕따] 시켜 끌어내렸다.

좌익이 그러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게 그들의 [사]는 이유니까. 그러나 [비(非) 좌익] 일부는 왜 자꾸 대통령들을 내쫓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가 주질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엔 이재명이 다시 세졌다. 겁이 났을 것이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견(異見)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반대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정도를 넘어 광장의 흥위병들과 한통속이 되어 탄핵 정변을 선동한 것만은, 웃겨도 보통 웃긴 일이 아니었다. 전천후 왕 기득권 세력이 마오쩌둥 <문화혁명>에 앞장선 끌어냈으니 말이다.

남한만이라도 지켜낸 역사의 교훈 있었나?

자신의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는 비(非) 좌파라면, 설령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직업 혁명 운동에 이용당하지는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게 역대 혁명사의 교훈이다.

러시아-중국 혁명 때의 비(非) 좌파는 이 교훈을 미처 새기지 못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한국의 [이승만 + 서방세계]는 이 교훈에 투철했기에 [남한만이라도] 지켜낼 수 있었다.

아슬아슬한 것은, 오늘날의 한국 비(非) 좌파 일부가 이 교훈을 또 망각하지 않나 하는 위기감이다. 그들은 2017년에 그것을 망각한 탓에, [좌파 통일전선(統戰戰線) 전술]에 자기도 모르게 휘말려 버렸다.

11월 11일, '혁명의 봉화'에 불 붙인다는데

요즘 이런 선동 포스터가 시내 곳곳에 나붙고 있다. 11월 11일을 기해 서울 도심에서,

- ▲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 ▲ 못 살겠다, 갈아엎자는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광장서 열린 헬러윈 참가 추도회에서도 "윤석열 꺼져라!" "탄핵하자!" 구호가 터져 나왔다. '윤석열 탄핵' '검찰 독재' 등의 대행 깃발도 휘날렸다. 주최측 대표는 이런데도 정치집회가 아니라고 연설했다.

[박근혜 대통령 갈아엎기]에서 재미를 본 저들이 또 한번 혁명의 봉화를 쥘이는 셈이다.

문제는, 혁명은 좌익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비(非) 좌파]도 광장에 나가 촛불 머릿수를 보태야만 혁명이 성공한다. 박근혜 탄핵 때 [비(非) 좌파] 연립들이 퇴진 선동에 앞장섰다. 많은 [비(非) 좌파] 시민과 대중이 이 선동에 휩쓸려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023년 11월 11일 서울 도심에서는?"

이 질문에 [비(非) 좌파] 국민/시민/대중/연립은 역사 앞에 분명히 고백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 '싸움의 법칙' 잊지 않아야

어느 편에 설 건가? 자유냐 전체주의냐? 자유대한민국이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이 선택에서 국민의 지도부는 갑자기 엉거주춤, 주눅거린다. 화강실 가고 싶나? 그럴수록 저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것이다. 기(氣)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이 흥위병 쓰나미 순간이다.

김기현-인요한보다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싸움의 법칙]을 잊지 않아야 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 더보기 ▼

국힘은 '병들', 더불어민주당은 '강' - 신원식 한동훈 유병호 이해진 치열 싸움이 한다	윤박 회동, 공동인사 대동단결 원칙 제시했다 - 기회주의 '위장 우파' 반응은?
---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0월 25일 게재 되었습니다.